

北韓 核問題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우리의 對中政策 方向

1994. 3.

文 興 鎬(政策研究室 責任研究員)

民族統一研究院

本 資料는 統一政策 立案의 參考資料로 作成한 것으로서
모든 內容은 論文作成者의 個人的인 意見이며 當 研究院의
公式的인 見解가 아님을 밝힙니다.

- 目 次 -

I. 問題 提起	3
II. 北한 核問題에 대한 中國의 基本認識과 政策方向	5
1. 基本認識	5
2. 既存 政策方向	6
가. 北韓에 대한 核開發 拋棄 勸告	6
나. 南北對話·協商 촉구	8
다. 對北壓力·制裁措置 反對	9
3. 政策變化 展望	10
III. 우리 對中政策 方向	13
1. 基本方向	13
가. 長期的인 關係發展 構圖 設定	13
나. 事案別 政策의 分離 推進	13
다. 北韓 核問題의 比重 縮小	14

2. 軍事·安保協力	15
가. 북한 핵문제의 長期的 空轉狀況下에서의 군사·안보협력 ..	15
나. 北韓의 核保有狀況下에서의 군사·안보협력	16
3. 美·北韓 修交과정에서의 韓·中協力	17
4. 中國의 對內外 政策變化에 대한 對備策 강구	19
5. 統一對備 韓·中協力	20

I. 問題提起

- 북한의 NPT 탈퇴(1993.3.12) 이후 북한 핵문제가 국제적 사안으로 대두되면서 우리 정부 및 미국, IAEA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북한 핵문제의 透明性 확보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왔으며, 이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되었음.

- 그러나 중국은 북한 핵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위해 자신들의 對北韓 영향력을 충분히 활용하는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으며, 간접적이고 내면적인 勸告 이상의 역할 수행에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중국의 이러한 태도는 자국의 政治·經濟·外交的 考慮에 기초한 것이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 정부 및 국제사회가 중국의 역할을 충분히 유도하지 못한 측면도 배제할 수 없음.

- 따라서 우리 정부는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기본입장과 정책방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긍정적인 역할을 증대시킬 수 있는 對中 政策을 수립·추진하여야 함.

- 본 보고서는 향후 북한 핵문제의 사태진전과 연계하여 중국의 실질적인 역할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동시에, 중·

장기적인 차원에서 남북한 交流·協力과 美·北韓, 北·日 關係改善 등 북한 핵문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안들의 진전과정을 염두에 두고 한·중 협력방안을 검토·제시하고자 함.

Ⅱ.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基本認識과 政策方向

1. 基本認識

- 중국은 對南北韓關係의 균형을 통한 한반도의 안정과 현상 유지 및 영향력 확대, 남한과의 경제교류·협력 강화 등 對韓半島政策 목표 실현의 연장선에서 북한 핵문제를 인식하고 있음.
 - 즉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기본인식과 정책방향은 對한반도정책과 不可分의 관계를 맺고 있음.
- 따라서 중국은 기본적으로 북한 핵문제가 자신들의 對한반도정책 목표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남북한 쌍방의 핵무기 보유 금지 및 한반도 非核化 지지, 당사자간의 對話·協商에 의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여 왔음.
- 한편 중국은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남북한간, 북한과 국제사회간의 대립을 최소화함으로써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유도하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중국의 仲裁力量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음.

- 즉 중국은 자신들의 역할에 대한 한국·미국·IAEA 등의 기대를 심분 활용하여 북한 핵문제 이외의 다른 사안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려 하고 있음.

2. 既存 政策方向

- 중국은 북한 핵문제로 인한 북한과 한·미·IAEA간의 대립이 고조되면서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정책적 선택에 어려움을 겪어 왔음.
 - 즉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극력 저지하고자 하는 國際輿論에 便乘하기도 어렵고 북한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할 수도 없는 상황에 직면하였음.
- 따라서 중국은 자신들의 정책적 선택의 제약을 최소화하고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① 북한에 대해 핵개발 포기를 간접적으로 勸告하고, ② 남한에 대해 성의있는 對話·協商을 촉구하며, ③ 국제사회의 對北 壓力·制裁措置를 강력히 반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여 왔음.

가. 北韓에 대한 核開發 拋棄 勸告

-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이 남북한의 軍事的 均衡 喪失, 일본 등

주변국가들의 核武裝을 促進함으로써 한반도 및 동북아 주변정세의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으나, 북한 핵문제가 중국의 國益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인식하고 있지는 않음.

- 기본적으로 중국은 韓·美·日에 비해 북한의 핵개발 움직임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고 있음.

- 이는 북한의 核開發 能力에 대한 회의적 평가와 북한의 핵개발 자체가 중국의 國益에 치명적인 損傷을 가하지 못한다는 판단에 기인함.

○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 움직임을 억제할 필요성은 갖고 있지만, 그 방식은 일부 서방국가들이 제기하는 대북 압력·제재의 차원이 아니라 간접적인 勸告·說得 차원에서 평화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음.

- 즉 중국은 중·북한관계의 심각한 損傷을 감수하면서까지 대북 강경조치를 취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않음.

○ 따라서 중국은 남북한의 핵보유 반대, 한반도 비핵화 지지라는 일반적인 입장 표명과 함께, 高位指導部의 공식·비공식 접촉을 통하여 북한의 핵개발 포기를 간접적으로 勸告·說得하는 정책을 취하여 왔음.

- 이는 중국이 의도하는 북한의 핵개발 억지 뿐만 아니라 한국·미국·IAEA 등에 대해 북한과의 평화적인 대화·협상을 촉구

하기 위한 名分을 確保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임.

나. 南北對話·協商 촉구

- 중국은 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의 모든 현안이 外勢의 介入없이 남북한 당사자간에 해결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남북대화·협상을 북한 핵문제 해결의 가장 理想的인 方式으로 강조하여 왔음.
 - 중국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한간의 「기본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실천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 중국이 남북한 당사자간의 대화·협상을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을 강조하는 실질적인 理由는 다음과 같음.
 - 첫째, 북한의 일방적인 지지 요구를 回避하는 동시에, 對북한 압력 행사를 촉구하는 한국의 요구를 拒否할 수 있음.
 - 둘째, 外勢의 介入을 抑制할 수 있음.
 - 셋째, 북한 핵문제와 관련, 구체적인 입장이나 역할을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을 回避할 名分을 확보할 수 있음.

- 중국의 이러한 정책은 「기본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의 不履行, 북한의 NPT 탈퇴, IAEA 사찰 중단 등으로 북한 핵문제가 난관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지속되었음.
 - 북한의 NPT 탈퇴에 대한 직접적인 論評을 回避함.

- 韓昇洲 외무장관 訪中時(1993.10), 중국의 구체적인 역할을 제시하기 보다는 남북대화·협상을 가장 우선적인 방식으로 강조함.

다. 對北 壓力·制裁措置 反對

- 중국은 남북대화·협상을 북한 핵문제 해결의 일차적인 방식으로 인식하면서도 북한 핵문제가 국제적 현안으로 부각되자, 북한과 미국·IAEA간의 대립을 최소화하고 국제사회의 對北 압력·제재 움직임을 억제하는 데 주력하였음.
 - 對北 압력·제재에 관한 국제여론이 고조되면서 북한 핵문제가 남북한 당사자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남북한, 미국, IAEA간의 문제로 확대되었다고 인식함.
- 따라서 중국은 북한 핵문제와 관련, 4개 당사자간의 公平·合理·全面的인 대화·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압력·제재 등의 강경조치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음.
 - 북한의 입장과 국제여론을 모두 의식하는 중간자적 입장에서 兩者의 마찰을 해소하는 데 주력함.
 -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1993.5.11)과 유엔총회 대북 결의안(1993.11.1) 및 IAEA 이사회의 북한 핵문제 유엔 안보리 상정 결의안(1994.3.21)과 관련, 立場을 留保하는 형식으로 棄權함.

- 또한 중국은 미·북한회담을 북한 핵문제 해결의 중요한 轉機로 인식하는 한편, 비록 중국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당사자는 아니지만 각 당사자간의 대화·협상 진전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강조하였음.
 - 국제적으로 민감한 사안의 해결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자국의 國際的 位相을 提高하는 동시에 對美關係에서 유리한 與件을 造成하고자 함.
 - 핵문제 해결과정을 통해 미국과의 관계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하는 북한을 측면 지원하려 함.

- 북한과 미국·IAEA의 대화·협상을 진척시키기 위한 중국의 정책은 우선 미국과 IAEA에 대해 중국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점을 주지시키는 한편, 북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물리적인 대북 압력·제재조치 억제, 對美·對日 關係改善 적극 지원 등을 擔保하는 형태로 쌍방의 이해와 양보를 촉구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음.

3. 政策變化 展望

- 중국은 북한 핵문제의 획기적인 변화가 없는 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전제로 북한의 입장과 국제여론 사이에서 어느 일방

을 지지하기보다 자신들의 立場과 原則을 반복하고, 그 과정에서 자국의 國益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임.

- 특히 최근 남북대화 凍結, 미·북한 3단계회담 개최 가능성 불투명, 유엔의 對北制裁 움직임 등에 따라 북한 핵문제가 장기적으로 空轉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중국은 기존의 입장과 정책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을 것임.

○ 그러나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부분적인 태도 변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 즉 중국은 기존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북한 핵문제의 局面轉換(북한의 핵보유 또는 핵문제 해결)에 따라 정책방향을 융통성있게 조정할 가능성이 높음.

○ 특히 북한 핵문제가 IAEA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현재 유엔 안보리에 상정되어 있으나, 유엔의 對北 制裁措置가 즉각 발동되지는 않을 것이며 북한의 태도 변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은 유엔의 대북 제재조치 발동을 최대한 지연시키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임.

○ 따라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정책은 북한 및 유엔의 대응 여하에 따라 대체로 「消極的인 觀望」과 「積極的인 仲裁」의 범위내에서 조정될 것으로 전망됨.

- 消極的 觀望: 유엔의 대북 경제제재조치가 可視化되고 중국이

실효성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어려울 경우, 중국은 유엔결의에 기권하고 제재조치에 동참하지 않는 등 消極的인 입장을 취할 것임. 다만 중국은 유엔의 군사제재조치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

- 積極的 仲裁: 북한이 태도 변화 움직임을 보일 경우, IAEA의 대북한 재사찰과 남북대화 및 미·북한 회담 재개를 주선하는 등 중국은 積極的인 중재역할을 自任하고자 할 것임.

○ 결국 중국은 기존의 정책기조를 고수하면서도 북한 핵문제가 악화되어 자신들의 역할이 제한되거나 별다른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극적인 관망자적 태도를 견지하여 國益損失을 최소화하고자 할 것이며, 반대로 북한 핵문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전될 경우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부각시킴으로써 國益을 極大化하고자 할 것임.

- 또한 북한 핵문제의 惡化·解決의 中間次元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각종 사태변화에 대해서는 소극적 관망자, 적극적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적절히 혼합하여 적용하고자 할 것임.

Ⅲ. 우리의 對中政策 方向

1. 基本方向

가. 長期的인 關係發展 構圖 設定

- 동북아 지역의 平和와 發展을 주도하는 同伴者關係 형성을 목표로 統一 以後까지를 고려한 장기적인 한·중 關係발전 方向을 설정함.
- 단기적 이해관계에 집착하거나, 특정 懸案에 편향된 정책을 추진하기 보다는 多角的인 교류·협력 증진을 통해 양국관계의 底邊을 확대함.
 -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협력도 이러한 關係발전 구도 속에서 탄력있게 추진되어야 함.

나. 事案別 政策의 分離 推進

-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軍事·安保協力과 일반적인 交流·協力を 구분한 對中政策을 추진함.
 - 전반적인 一貫性은 유지하되, 각종 사안에 따라 融通性있게 대처함.

- 양국간의 근본적인 입장 차이로 인해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어려운 군사·안보협력에 지나치게 집착함으로써 관계발전이 위축되거나 특정 사안에서 불필요하게 양보하는 경우를 억제함.
- 交流·協力이 용이한 분야에서의 관계발전을 통해 쌍방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예민한 사안에서의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함.

다. 北韓 核問題의 比重 縮小

- 對中政策에서 북한 핵문제가 중요한 부분을 점하는 것은 불가피하나, 大中政策 전반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협력 유도」를 지나치게 의식할 필요는 없음.
- 특히 중국이 對韓半島政策을 근본적으로 修正하거나 북한의 핵보유와 같은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기존의 정책을 고수할 것이라는 점에서 한국이 중국의 정책변화를 직접적으로 유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對中政策에서 북한 핵문제가 차지하는 比重을 縮小하고 보다 장기적 차원에서 交流·協力 증진을 통한 간접적인 정책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2. 軍事·安保協力

- 한·중 군사·안보협력은 북한 핵문제의 사태진전과 긴밀한 연관 하에 추진되어야 함.
 - 중국은 북한 핵문제의 진전상황에 따라 한국과의 협력수준을 달리할 것임.
 - 따라서 북한 핵문제가 장기간 空轉되는 상황과 북한이 核武器를 保有하게 되는 경우를 區分하여 한·중 군사·안보협력을 추진함.

가. 북한 핵문제의 長期的 空轉狀況下에서의 군사·안보협력.

- 한·중 군사·안보협력을 단순한 對北對應 차원이 아닌 동북아시아의 평화정착을 위한 多者間 安保協力 차원으로 확대·추진함.
 - 안보협력의 궁극적인 목표를 북한의 도발억제, 한반도 평화정착으로 설정하더라도 중국과의 협의과정에서는 북한에 대한 우려와 위기의식을 지나치게 노출시킬 필요가 없음.
 - 한국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중국은 한반도 평화정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

- 한·중 군사·안보협력의 底邊을 지속적으로 확대함.
 - 북한 핵에 대한 대응 차원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쌍방간, 다자간 군사·안보협력의 場을 모색함.
 - 중국 軍部가 중국의 對北韓 정책결정과정에서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중국의 권력변동과정에서 중대한 變數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다각적인 접촉·교류를 모색·추진함.

나. 北韓의 核保有狀況下에서의 군사·안보협력

- 중국은 북한의 핵보유가 기정사실화되더라도 북한의 핵보유 자체가 자국의 정치·경제·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인식하에 북한의 핵보유를 현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음.
 - 다만 중국은 한반도 안정유지라는 한반도 정책목표와 배치되는 북한의 핵사용 억제 및 핵안전사고 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인 바, 북한 핵무기의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할 것임.
 - 따라서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술자를 파견하고 북한 관리요원을 교육하는 등 관련기술을 제공함으로써 핵무기 안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북한 핵무기 사용을 간접적으로 통제하고자 할 것임.

-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상황에서 한·중 안보협력의 최대과제는 북한의 核使用을 억제할 수 있는 확고한 安全裝置의 확보이며, 중·장기적인 차원에서의 과제는 핵무기의 안전관리 및 핵무기 생산 확대 방지, 핵의 평화적 이용 및 핵무기 撤廢인 바, 이를 위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촉구하여야 함.
 - 최근 중국의 에너지난을 감안, 중국의 핵발전소 건설을 위한 한·중 기술·자본협력 등을 추진함으로써 핵관련분야에서의 한·중 協力體制를 구축하는 동시에, 북한의 핵무기 관리 및 핵이용실태와 관련한 정보를 획득함.
- 한편 북한의 핵보유가 기정사실화되면 한국의 核開發, 한국내 核武器 再配置 등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야기될 것인 바, 이 문제는 미국의 對韓 핵우산 제공 및 한·미 안보동맹관계 유지, 중국의 對北韓 핵무기 안전관리 및 핵사용 억제에 대한 확실한 담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
 - 이와 관련, 韓·中 基本條約(불가침조항 포함)을 체결하고 북한의 핵선제 불사용을 보장받도록 함.

3. 美·北韓 修交過程에서의 韓·中協力

- 북한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미·북한 수교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과정에서 한·중간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됨.

- 중국은 미·북한 관계개선이 가속화될 경우 중재역할에 적극성을 보일 것임. 특히 중국은 미·북한 관계정상화를 위한 政治會談에서 북한의 人權問題, 改革·開放 확대 등의 문제가 쟁점화될 경우 미·북한간 막후절충 역할을 수행하고자 할 것임.
 - 예를 들어 중국은 북한의 人權改善과 경제개혁·개방 확대를 중국 수준으로 적극 유도한다는 조건으로 미국이 북한의 現體制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음.

- 미·북한 關係正常化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한국은 중국에 대해 북한의 인권개선 조치와 連繫하여 이산가족의 자유왕래 추진, 남북 「기본합의서」 성실 이행, 북한의 改革·開放 확대 등을 유도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임.
 - 이와 관련, 중국의 일부 지역(북한에 비교적 인접한 지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북한 勞動力 使用, 북한지역에서의 한·중 합작기업 설립 운영, 중국내 한국기업(혹은 한·중 합작기업)이나 延邊 科學技術大에서 북한기업의 간부, 노동자의 技術教育 실시 등을 위해 중국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구함.

- 한편 미·북한 관계정상화 과정에서 중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모색하면서도 한국은 중국의 입장변화 가능성을 계속 염두에 두어

야 할 것임.

- 현단계에서 중국이 미·북한 관계개선을 원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나, 이는 중국의 對北韓 영향력과 이를 바탕으로 한 對南韓 영향력의 확대·유지를 전제로 한 것임.
- 따라서 중국은 미국의 對北韓 關係正常化가 자신들이 설정한 북한의 경제발전, 국제적 位相 강화의 범위를 벗어나 미국의 對북한 영향력 확대와 중국의 영향력 축소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의 對北 修交過程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음.
- 이 경우 중국은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추진하면서도 사실상 「평화적 이행」(和平演變)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관계정상화의 速度·範圍를 조절하려 할 것임.

4. 중국의 對內外政策 變化에 대한 對備策 강구

- 중국의 대내적 당면과제는 鄧小平 후계체제의 확립, 개혁·개방 정책 추진과정에서 심화된 社會主義 體制·理念과 市場經濟體制의 不協和音, 中央과 地方의 對立, 階層間 葛藤 解消이며, 대외적 과제는 대만문제 해결, 홍콩반환, 티베트 등 민족자치구의 독립움직임 억제 등임.
- 鄧小平 사후 권력변동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대비책을 강구하고, 중국지도부의 權力構造, 人脈, 性向, 對北韓觀 등

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기초로 黨·政·軍지도부와의 공식·비 공식 접촉을 적극 확대함.

- 중국이 주력하는 시장경제체제 확립과 관련,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모색함. 예컨대 중국이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 기업경영·관리수준 제고와 관련, 한국정부 또는 기업이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함.
- 중앙정부와의 관계 강화 이외에 중국의 地方政府, 地方企業들과의 유대를 강화함.
- 민간차원의 韓·臺灣關係를 강화하는 동시에 兩岸關係의 변화 양상, 대만의 대내외정책 변화, 美·日·佛·獨 등 주요 서방국의 對臺灣政策 변화 추이를 주시함.
- 홍콩반환과 관련된 中·英協商의 진전상황, 외부세력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는 티베트의 독립 움직임 등도 고려하여 대중 정책을 수립·추진함.

5. 統一對備 韓·中協力

-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공식 입장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한민족의 염원을 존중하며 한민족 스스로의 평화통일을 지지한다”는 것임.
- 이는 중국이 원칙적으로 한반도의 통일을 지지하되 통일방식은 반드시 「남북한간의 對話·協商」에 의한 「平和的」, 「自主

的」통일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부가한 것임.

- 즉 중국은 한반도의 통일을 반대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자국의 동북아정책 및 한반도정책 목표 실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武力, 外勢介入에 의한 통일을 憂慮하고 있음.

- 한편 중국은 북한의 정치·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남한에 의한 북한의 吸收統一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억제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대내외적 지원을 지속하되,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일차적으로 외세의 개입을 견제하고 「統一韓國」과의 새로운 관계발전을 도모하는 선에서 자국의 이해관계를 유지하고자 할 것임.

- 즉 중국은 蘇聯·東歐의 붕괴과정에서 융통성있는 정책을 추진했던 것처럼 일단 한반도의 상황변화가 기정사실화되면 신속한 政策轉換을 시도할 것임.

-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정책방향을 감안할 때, 통일과 관련하여 한·중협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自主·平和統一意志 및 동북아지역 평화·발전 촉진요인으로서의 統一韓國位相을 지속적으로 認識시켜야 함.

빈 면

◎發刊資料目錄 案內◎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の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 91-03 北韓體制的 變化: 現況과 展望
-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92-02 북한의 權力構造와 김일성 이후 政策方向 전망
-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 92-04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 92-05 轉換期の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 93-03 中國의 改革·開放
- 93-04 北韓開放에 대한 周邊4強의 立場
- 93-05 南北韓 關係 現況 및 94年 情勢展望
- 94-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展望

〈研究報告書〉

-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대한 對應方向
-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 회담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 91-11 在野統一案 研究
-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Ⅰ)
- 91-13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 91-14 「한민족공동체」 具體化方案 研究：社會·文化·經濟 交流·協力 中心
-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北韓의 中國式 改革·開放 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 를 중심으로
-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Ⅱ)
-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理論 및 歷史와 事例을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的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社會·文化的 同質性 增大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3-02 金日成著作 解題
-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화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 秩序 豫測(Ⅳ)
- 93-05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 93-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Ⅲ)-
- 93-07 東北亞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 應策
- 93-08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私有化政策 研究
- 93-09 對北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
- 93-10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 關係
- 93-11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과 核政策 展望
- 93-12 北韓의 人權實態 研究
- 93-14 베트남 統合事例 研究
- 93-15 金正日著作 解題
- 93-16 韓半島 軍備統制方案 研究: 유럽 軍備統制條約의 示 唆點과 관련하여
- 93-17 北韓 家族政策의 變化
- 93-18 主體思想의 理論的 變化
- 93-19 예멘 統合事例 研究

- 93-20 北韓 政治社會化에서 傳統文化의 役割: 北韓映畫分
析을 中心으로
- 93-21 北韓의 에너지 수급실태 연구
- 93-22 北韓 國營企業所의 管理運營體系
- 93-23 社會主義體制 改革·開放 事例 比較研究
- 93-24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改訂版)
- 93-25 「한민족공동체」 形成過程에서의 僑胞政策
- 93-26 日本의 核政策
- 93-27 東北亞의 新經濟秩序
- 93-28 러시아聯邦의 對北韓政策
- 93-29 南北韓 政治共同體 形成方案 研究
- 93-30 統一論議의 變遷過程 1945~1993

〈統一情勢分析〉

-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影響을 중심으로
- 91-02 고르바초프 權力的 現況과 展望
- 91-03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影響을 중심으로
-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結果分析
-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分析
-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 91-11 엘진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 安保에 미치는 影響
-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 韓關係와 관련하여
-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 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制度 中心
-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1~6)
-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南政策
- 93-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 93-0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7~9)
- 93-07 中國의 核實驗이 國際 및 東北亞情勢에 미칠 影響

- 93-08 第5次 亞·太經濟協力體(APEC) 會議를 계기로 본
亞·太地域 協力の 發展方向
- 93-09 1993年 12月 黨 中央委 全員會議 및 最高人民會議
結果 分析
- 94-01 美國의 對韓半島 政策-北韓 核問題와 美·北 關係改
善을 中心으로
- 94-02 中國의 對北韓政策: 現況과 展望
- 94-03 북한의 對外 개방 現況과 전망-외자유치 관련법 제
정을 中心으로
- 94-04 러시아의 權力構造 改編에 따른 對內·外政策 展望
- 94-05 北韓 核問題에 대한 中國의 立場과 우리의 對中政策
方向

〈世界主要事件日誌〉

-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1991. 6. 30)
-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1991. 9. 30)
-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1991. 12. 31)
-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1992. 3. 31)
-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1992. 6. 30)
-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1992. 9. 30)
-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1992. 12. 31)
-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1993. 3. 31)
-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1993. 6. 30)
- 93-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7. 1~1993. 9. 30)
- 93-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0. 1~1993. 12. 31)

〈年例情勢報告書〉

- 9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1991~1992
- 9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1992~1993
- 93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1993~1994

〈論 叢〉

-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1993. 7)
- 統一研究論叢 第2卷 2號(1993. 1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199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3)

〈資 料〉

- 92-01 統一 및 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國文篇)
- 92-02 統一 및 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外國語篇)
- 93-01 藏書目錄：單行本·研究報告書
- 93-02 藏書目錄：特殊資料
- 93-03 獨逸統一條約 批准法律

北韓 核問題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우리의 對中政策 方向

統一情勢分析 94-05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政策研究室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5-19

전화 : 232-4726, FAX : 232-5341

印刷處 웃고문화사 전화 : 267-3956

印刷日 1994년 3월 일

發行日 1994년 3월 일
